

김기식 의원...인터넷전문은행 허용방안, 철회되어야



제10호 2015년 6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삼척 동해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일꾼... 이이재 의원



“가장 낮은 자세로 사회의 약자와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대구 수성갑 잠룡 들이 대결되나?



울산 관내...스쿨존, 주차장에 잠식당해

관세청 면세점 평가점수 공개 계속 거부...재벌특혜 의혹 증폭

법무부장관 공석 누가 되나?



울진군 국가지원 최초 국제거점형 마리나조성



울진으로 해양레포츠 즐기러 가자



김우남의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법안 발의



원혜영의원, 난민법 개정안
발의 이동권 보장 등 의무화



박광온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백군기 의원, 대통령-총리 동시
부재 대비한 NSC법 발의

임태수 대왕금강송보존회장, “울진의 神松, 대왕금강송을 보존하자”



대구 수성갑 잠룡들의 싸움되나?

[김영호 기자] 메르스 사태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 모두 총선체제를 위한 당직개편에 들어가는 등 새누리당의 경우 일찌감치 지역구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정치거물들의 복귀와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도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대구 수성갑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내 이한구 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곳은 강은희 현 비례대표 의원과 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본지는 이곳에 20대 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2명의 후보의 속내와 야권의 동향을 살펴본다.

김문수·강은희, 대구 수성갑 출마 공식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16일 경주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초청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 특강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마침 빈자리가 생겼고,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나를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어 고향을 위해 봉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사회과학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전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인해 어렵고 국가가 신인도가 추락하는 것은 리더십의 부재”라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대통령이 될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국무총리는 공석이며, 여야는 따로 놀고 있다”면서 “위기의 국가를 생각한다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사회의 공무원과 교사가 운데 도전과 창의정신은 없이 안전한 직장이라는 데서 오는 안일함을 갖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공무원과 교사와 같은 안전하고 편안한 직업만 원하고 여기에 안주하는 나라는 결코 잘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정치의 중심인 대구를 혁신하고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경기 부천소사에서 3선을 지낸 김문수 전 위원장이 차기 총선에서 대구·

김문수 출마에 강은희 일전 불사…김부겸 40%대 지지율 2번이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강은희 현 비례대표 의원

김부겸 전 의원

경북 지역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강은희 “지명도와 선호도는 달라”

17일 강은희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흥미로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한구 의원이 내년에 대구 수성갑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특히 대구 수성갑을 지목한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구 수성갑에 20년 가까이 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대구 수성갑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당 입장에서 수도권 지역이 다소 약세”라면서 “(김 전 지사가) 경기지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치열하게 도전하셔서 대권에 도전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김 전 지사의 이곳 출마를 부정적으로 견제했다.

사실 강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출마 공시화 전부터 수성 갑에 공을 들였다. 수성갑 조직위원장이 공모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모에서 선출을 담당하는 조직 강화특위 위원을 사퇴했으며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왜 사퇴 했느냐에 대한 변을 하는 상황에서 “수성 갑에 도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수성갑에 20년 가까이 살았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대구 수성갑에 거주하고 있다. 오히려 이한구 의원이 여기에 임시거처를 한 것과는 나는 아이들 키우고 학교에 보내면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문

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했다”며 “교육과 문화 중심 지역으로서 서울 강남지역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아 교육을 위해 이주하는 주민도 많

이 때 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후보들은 역대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TK(대구, 경북),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PK(부산, 경남),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호남, 다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TK라는 근거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이라 대다봤다.

경선 과정에서도 책임당원들의 당심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리당원들이 대거 호남에 몰려있듯이, 새누리당의 책임당원들은 영남에 편중돼 있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그런 면에서 이 지역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 직접 민심 속으로 파고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한구 의원이 김문수 전 지사를 지원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김문수 전 지사 아무래도 객관적인 지명도에서 보면 강은희 의원보다는 지명도가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명도 때문에 아마 이한구 의원님께서 추천을 하시고, 객관적으로 중립을 취하시겠다고 하면서도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명도와 선호도가 일치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지역에 대한 비전 제시가 더 중요하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비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해 강 의원은 “넓게 보면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 중에 한 분이고 지난 재보궐 선거 때 등을 지역에도 당에서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고사를 했다”면서 “크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다소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치열하게 살아남아 대권에 도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강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당내 대권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구지역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야권 김부겸과의 결전

이 지역 야권에서는 누구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이 지역 타파의 아이콘으로 만만하지 않은 상대다.

김문수 전 지사는 김부겸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수성구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선거 때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곧장 짐을 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대구에 내려왔다. ‘지역구도 극복’을 기치로 내세워 선거에서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지만, 여전히 대구에 머무르고 있다. 또 체육대회, 경로잔치, 모임 등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찾아다니며 인맥을 넓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국수와 떡볶이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친근감으로 다가가는 모습에 두 차례 40%대의 득표율을 올리며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법안 발의

특조위 활동기간 올해 1월1일부터 시작으로 보면 입법목적 달성 어려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2016년 7월까지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 발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이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을 끝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17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2014년 11월19일 국회를 통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법 제정 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하듯이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도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함께 시행되어야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5월 11일에야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특조위 직원의 정원 등을 확정하는 시행령 제정이 법률 시행 후 5개 월이 넘어서야 이뤄짐에 따라 실질적 활동을 담당할 사무처 직원의 채용절차도 지난 5월 말부터야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조위 활동기간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7조를 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이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6개

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성이 마친 날”, 즉 위원회 활동의 기간이 위원들의 임기 개시 시점이라는 정부와 사무처 등의 구성이 완료된 때라는 야당 의원들의 해석 등이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아직도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장처럼 2015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활동 기간으로는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연장할 수 있는 활동기간은 현행처럼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특조위가 공무원으로 임명하



▲ 김우남 의원

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조사 1과장 등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무처 직원을 7월 이내에 임명

할 계획임에 따라 이로부터 약 1년 후까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활동기간의 시한을 일자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해석 논란을 없앤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또 다른 목적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입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에서부터 난민 기본권 보장돼야”

원혜영의원…난민법개정안 발의 이동권 보장, 전화시설 이용, 의료지원 등 의무화

원혜영 의원은 20일,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종교나 정치적 박해 등으로 고국을 떠나 떠도는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경기도 부천 오정)이 18일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에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동권 보장과 통신설비의 이용,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의무화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2년 전 동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난민 인정비율은 5%에 불과하다”며



▲ 원혜영 의원

“공항에서부터 난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정비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수원 영통)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

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열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혼선을 빚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보듯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확진자, 격리대상자는 물론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행규칙으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법률이 아닌 시행

백군기 의원, 대통령-총리 동시 부재 대비한 NSC법 발의



▲ 백군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국정 수행이 어려울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직무를 부총리는 물론 국무위원까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9박 12일 일정으로 남미 순방을 떠나 자리를 비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계이트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현행법에 따라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정부인사가 없어 국가안보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윤군 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은 국무총리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현행법을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와 국무위원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손인준, 윤후덕, 부좌현, 김광진, 김태흠, 송영근, 강길부, 이찬열, 김성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 강화 대책 마련”

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 김용익 의원

해외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이후 확진 환자 및 격리자가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당시부터 감염병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국내로 유입된 이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4일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환자의 생활보호와 감염병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한 의료기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두 번째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이 매우 허술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가속화시키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은 자가격리 실효성, 전문인력 부족과 역학조사 미흡, 감염병을 전달하여 진료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부족 등과 동시에 과거에 만들어진 면ニュ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인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외 신종감염병’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화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유입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 기관 동원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서는 병원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특성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보고서 발간, 지침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로서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를 명확히 했고, 의료기관에

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 진료 및 치료에 따른 비용 국가 부담, 격리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감염병의 유입 또는 확산에 따른 위기 경보 등급, 등급에 따른 중앙방역 대책 기구의 종류 및 잠식법위, 인력 및 시설 동원 계획, 해외 신종감염병의 수시 반영, 비상시 동원해야 할 자원의 등록 및 훈련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관리 시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격리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당국의 희망적 관측과 낙관적 전망이 ‘슈퍼전파자’ 역할 했다

김영환 의원, 2선 3선의 철저한 방어망 쳤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



▲ 김영환 의원

김영환 국회 의원은 18일 메르스 특위에서 한국-WHO 합동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감염 발생 여부, 슈퍼전파자 확산 및 3차 유행 병원 발생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정해관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지역감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중동의 경우 지역사회에 영향이 있더라도 소규모의 감염이 있었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나와 있다. 우리나라로 당연히 대비는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의 증거는 찾을 수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

장은 슈퍼전파자 확산 및 3차 유행 병원 발생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고 본다. 슈퍼전파자가 20명~30명 이상(감염시키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명 이상 발생시키는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정확하게 이를

을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몇 개 병원은

추가적으로 삼성하고 관련돼서, 그 이후에 대규모 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들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보건당국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발언이 속출했다. 보건당국의 희망적 관측과 낙관적 전망이 ‘슈퍼전파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건당국이 상황을 보다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2선 3선의 철저한 방어망을 치고 그들을 크게 쳤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메르스 격리자 생활보호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국회 추진

유승희 국회의원, 감염병의 예방 관리법 개정안 발의



▲ 유승희 의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회계부회장은 “격리자 수가 6500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확진환자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가 급증하고 격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격리자들이 불편과 걱정 없이 격리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와 긴급지원 및 방역 관계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익을 위해 격리되어 있는 격리기간 중에 생계를 걱정하거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우려 없이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메르스 사태 대책 수립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드림커널

등록번호 : 울산 다 01103
www.newsdream.net

대표전화: 0505-871-0012

편집·발행인: 金永浩 / 편집국장: 朴號煥
편집국장 대우: 김성욱 / 인쇄처: (주)대동프린텍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길 21-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영호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법무부 장관직이 다시 공석으로 남아 누가 뒤를 이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석이 한 상대 전 검찰총장을 추천한다고 전 국회의원이 여당 고위인사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아시아뉴스통신이 단독 입수했다.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고위인사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단독 포착했다. 포착된 사진 속 문자내용에는 “후임법무인선에 고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추천 드린다”면서 “이번에 임명할 법무는 내년 총선을 치뤄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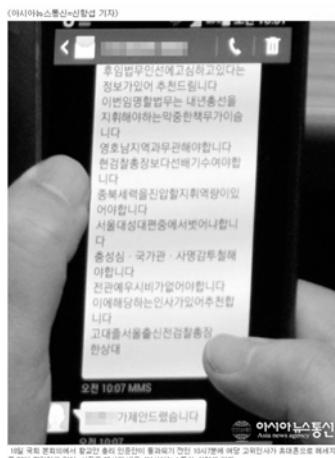
이어 ▶ 영호남지역과 무관해 야한다 ▶ 현 검찰총장보다 선배 기수여야 한다 ▶ 종북세력을 진압 할 지휘역량이 있어야한다 ▶ 서울대, 성대 편중에서 벗어나야한다 ▶ 충성심,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해야한다 ▶ 전관예우 시비가 없어야한다 등의 조건부적 내용이 문자에 담겨있다.

끝으로 “해당하는 인사가 있어 추천 한다. 고대출, 서울출신 전 검찰총장 한상대”라고 기재돼 있다. 해당 문자는 황교안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기 전인 10시7분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야당 관계자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정부나 여당과 연관이 깊은 인물인 만큼 문자를 주고받은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법무부장관 공석 누가 되나?

아시아뉴스통신, 여당고위인사 휴대폰 속 후임 법무장관 추천문자 '포착'
소병철 전법무연수원장·김현웅 서울고검장 유력, 한상대 전검찰총장 다크호스



꽤 있을 것이라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광상우 감사원 감사위원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광상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검찰총장을 맡았던 한상대 전 총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측이다.

한상대, 갑작스런 후보군 들어

후임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청와대가 후보군 중 ‘비(非)영남’ 출신으로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현웅 고검장과 소병철 전 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김현웅 서울고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소병철 전 원장은 역시 전남 순천 출신으로 역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반면, 광상우 위원과, 길태기 전 고검장은 서울 출신이다. 노환균 전 원장(경북 상주)과 광상우 이사장(대구), 석동현 전 지검장(부산)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그렇다면 한상대 전 총장도 의외로 후보군 중 유력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관예우 논란에서도 비교적 김고검장과 소 전 원장에 처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공안 통으로 전관예우 논란에서 장관에서 총리까지 된 만큼 한상대 전 총장이라면 문안하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김 고검장은 황 총리와 함께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김고검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소 전 원장은 1988년 국가정보원 파견 당시 ‘북풍 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해체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7월 “법무부의 소병철 부장검사가 DJ 정부 때 이종찬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에 들어가 600명을 자르는 살생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소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두 차례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했지만 현 새누리당 내 반발이 커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청와대가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을 미룬 이유가 한 달째 공식인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돈다.

박홍근 의원, 소방관 안식년 도입법 발의



환자
이송 등
메르스
사태 해
결에 투
입된 소
방 관들
에 대한
격려 가
이 어지
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1회에 한정해서 1년간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종로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방관은 대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공무원이지만 방화복 등의 기본적인 장비마저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는 등 쳐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우도 많아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장기간 반복적 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장기근속 소방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

“
메르스 최일선 국민안전 위해 사투
벌이는 국민 신뢰도 1위 소방관…10년
이상 근속자 안식휴가제 도입 추진
”

특히 화재진압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아야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고, 동료나 사건·사고 피해자들의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 동안의 지적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울진으로 해양레포츠 즐기러 가자!

스킨스쿠바, 요트, 바다낚시 등 체험거리 가득



[김영호 기자] 2011년 10월 경북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에 들어선 울진해양스포츠센터. 오산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센터는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키스쿠바 전문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을 고루 갖춘 리조트다. 경관이 아름다운 울진의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도 좋고 한적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어촌의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어 마음 푸근한 곳이다. 이곳을 편의시설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 소개한다.

단체 해양캠프로 각광

울진해양스포츠센터에는 수심이 5m에 달하고 국내 최고의 다이빙 전용 플랫폼과 스키스쿠바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수병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햄버치료실, 2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휴게실, 풋살 경기장 등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스킨스쿠바 동호인들에게는 편안하게 스쿠버를 즐길 수 있어 여간 반갑지 않다. 숙박시설도 50인을 수용하는 단체실을 비롯하여 바다를 향한 오션뷰와 산을 바라보는 마운틴뷰로 나뉘어진 80인실, 18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병크베드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스키스쿠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나 단체 해양캠프로도 안성맞춤인 센터이다.

스쿠버다이빙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이론, 장비소개, 잠수풀 체험이다이빙을 해볼 수 있는 체험이다이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개방수역 체험이다이빙은 강사 인솔 하에 5M~10M 수심 정도에서 수중세계를 탐험한다.

국제적 마리나항만 후포항에서 해양레저도 즐겨

울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후포항은 국내 최대의 대개잡이 항구로 명성이 자자하다. 후포항의 자랑거리는 대개 뿐이 아니다. 파란 바다 위를 수놓는 요트의 이색적인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후포항은 지리적으로 활동해의 중심에 위치해 북쪽으로 러시아와 강원도, 동쪽으로 울릉도, 독도와 일본, 남

쪽으로 포항 부산과 동남아시아로 연결하는 크루즈 요트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다. 국토해양부로부터 '후포항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 지정'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천혜의 청정 수역과 왕돌초, 거북초 등 절경을 두루 갖춘 울진 바다는 요트,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세계 최상급이라는 평을 듣는다. 매년 국제규모의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열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현재 울진군 후포항에는 울진군요트협회가 상주하고 있으며 매년 울진군요트학교를 운영해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을 즐기고 있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강습을 받을 수 있다.

국제요트대회, 독도 우리땅 간접 효과 만점

대회코스는 요트를 타고 울진군 후포항에서 출발해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반환해 후포항으로 회귀하는 약 300km에 걸친 대장정이다. 울진군은 대회 개최를 통해 독도문제와 함께 공식명칭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동북아시아 최대 해양스포츠 이벤트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해양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 곳 요트대회 개최 장소에서 매년 윈드서핑대회도 개최되고 있으며 대회가 없는 시기에는 일반인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요트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보트와 다르다. 순수하게 바람으로 움직인다. 배 위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키를 조정하고 끄不可避免을 당기고 풀고 돌려서 물살을 헤쳐나가는 해양 레저 스포츠다. 바람 한 푹 없는 잔잔한 바다는 요트 마니아들에게 오히려 반갑지 않다. 강하게 부는 바람이 있어야 시원하게 바다 위를 달릴 수 있으니 말이다. 요트는 크게 딩기와 크루저로 나뉜다.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고 주로 바람으로 항해하는 1~3인용 소형 세일링을 딩기라 하며, 체험용으로 가장 많이 탄다.

윈드서핑 강좌 쉽게 배울 수 있어

후포항에서 끄不可避免과 서핑보드를 결합해 만든 수상레포츠의 꽃, 윈드서핑도 즐길 수 있다. 윈드서핑은 바다 위에서 끄不可避免를 잡고 바람의 강약에 맞춰 균형을 잡으며 세일링하는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하루에 3시간 강습을 받으면 기본적인 세일링이 가능하다.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을 이해하는 것.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바람의 방향에 따라 끄不可避免를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야 한다. 쉬운 기술은 곧 익힐 수 있으나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평생을 해야 겨우 완벽하게 익



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요트나 윈드서핑은 해양레포츠로서 직접 타는 사람도 즐겁지만, 파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낭만을 느낄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좋다. 푸른 동해 바다 위를 질주하는 하얀 끄不可避免들의 향연, 후포항의 새로운 불거리다.

북면 나곡리에 위치한 나곡 바다낚시공원은 2013년 10월 문을 열었다. 바다낚시공원은 바다 위에 인공적인

낚시장교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갯바위보다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다.

울진에서 동해바다를 낚다

나곡 바다낚시공원은 관리소부터 낚시장교까지의 이동로, 인근 전망대 까지 둑어 공원으로 조성해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탁 트인 동해바다

와 그 위를 가로지르는 잔교, 뾰족뾰족 서있는 해안절벽의 조화로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낚시공원 이용료 5,000원(관광객 입장료 1,000원)을 받는 유료낚시터지만 손맛이 좋아 많은 낚시객이 찾고 있다. 나곡 바다낚시장교는 총 130m로 그리 길진 않지만 넓은 발판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입장 시간이 조금씩 달라진다.

울진군, 국가지원 최초 국제 거점형

[조종래 기자] 그동안 이명박 정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마리나항 육성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레저수요 충족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은 물론,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마리나 개발 가능성이 큰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레저선박에 대한 제조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의 부족, 인프라 조성과 그에 따른 투자비용, 관광수요 창출 등 문제점이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 좌초 위기에까지 물렸다. 정부가 마나리항을 거점형으로 개발하겠다고 방침을 바꾸면서 천혜의 해양수산자원을 지닌 울진군이 국내 최초로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조성되게 됐다.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 수산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대한민국 최초로, 지난 해 1차 사업계획 공모시 울진군이 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후포 마리나항만은 동해안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 러시아 레저선박을 유치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수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트 교육 등을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요트아카데

미로써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484억 원(기반시설 225억 원, 클럽하우스 등 상부 시설 25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숙박시설 확충 등 부대사업은 마리나 항만의 활성화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울진군의 설득과 노력의 산물

해양수산부와 울진군 협상단이 2015년 1월 협상을 개시하여 약 3개

월 동안 4차례의 실무협상과 본 협상을 거쳐 2015년 4월 29일자로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체결에 따라 울진군은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 이후 운영방안 수립 등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담고 있다.

울진군이 다른 곳에 비해 국가적 예

산을 지원받아 세계적인 마리나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임광원 군수를 비롯한 실무진들의 노력이 크다.

2010년 1월 제1차('10 ~ '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리저히 보완해 2013년~2014년까지 실시된 해양수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다른 지역을 제치고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임광원 군수와 실무자들은 해양수산부를 수없이 방문해 울진군 후포항의 마리나항의 입지가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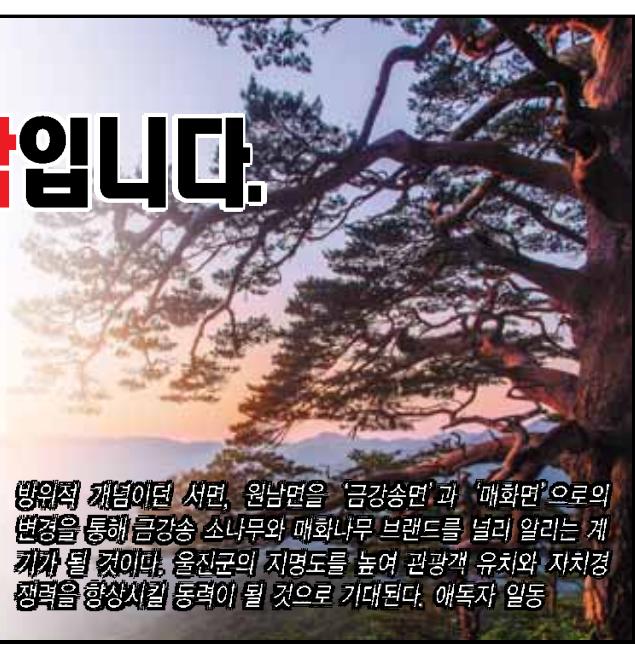
2015년 4월 21일

울진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2015년 4월 21일부터 원남면이 “매화면”으로

서면이 “금강송면”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방위적 개념이던 서면, 원남면을 ‘금강송면’과 ‘매화면’으로의 변경을 통해 금강송 소나무와 매화나무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울진군의 지명도를 높여 관광객 유치와 자치경쟁력을 향상시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독자 일동

마리나조성

합법을 수없이 알렸고 국제 요트대회 진행을 통해 그 만족도를 홍보해 나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리적인 여건(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삼았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철도 및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들어서면서 이 같은 문제도 해결된 것이다.

결국 앞날을 내다본 도로망 구축사업 등의 임광원 군수의 행정력이 빛을 발했다.

이 결과 거점형 마리나항 지정되고 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용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장을 하는 마리나항을 지어주는 형식의 완벽한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호화와 사치란 인식, 사실과 달리 돈 되는 시장

국내에서 그동안 요트는 일부 부유층의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 만큼 마리나산업은 국내에서는 그리 익숙하지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았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해양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 레저선박 수는 2천9백만 척, 시장규모는 500억 달러 수준으로 북미·유럽이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 마리나 수는 2만3천여 개이며, 90%가 북미 및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일본(570개), 중국(89개) 순으로 집계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지난 2013년

17만 척을 수출하는 등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오는 2020년에는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마리나개발에 나서고 있고, 싱가포르 정부는 슈퍼요트 중심의 리조트형 마리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청도(1천466척), 하문(1천 450 척), 산야(600척) 등에 대형 마리나항만을 개발 중이며, 싱가포르 정부는 부지 무상임대, 방파제 구축 등 민간투자사업을 과격적으로 지원한다.

대형요트 선호 추세로 슈퍼요트(24m 이상 호화요트) 시장이 급성장하여 오는 2017년경에는 그 수가 1만 척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슈퍼 요트 수가 3배 이상 늘어 지난 2012년 기준 6천척을 넘어서고, 2013년에도 355척(3.8조원)이 거래됐다. 슈퍼요트 시장의 40%는 이탈리아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들은 마리나의 대형화와 관광거점화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고, 신흥 마리나국들은 관광전략의 하나로 마리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경제적 300억원 추정에 고용유발 150여명

울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투자액과 수익(육상보관료, 계류장 이용료, 크레인이용료, 분양수익, 임대 수익 등)을 고려한 후포마리나항만 개



발사업으로 인해 국가(지역 포함)경제에 유발시킬 효과는 연간 3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취업자수는 연간 150여 명으로 분석됐다.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표적인 부동항인 블로디보스 폴에는 많은 요트와 보트 등 레저용 선박들이 계류하고 있으며, 접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항이긴 하지만 요트와 보트의 특성상 특별한 유통보관 또는 계류가 필요하여 다수의 요트와 보트 등이 부산의 수영요트경기장 또는 동해안, 남해안 지역의 마리나에 계류시키고 있으며, 현재 동해시-블라디보스-사카이를 운행하고 있는 헤리노선이 통해 DBS가 있고, 겨울철 러시아 요트 및 보트의 선주와 승선원들이 후포마리나에서 가까운 동해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출국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립되어 있다.

후포 마리나는 해외요트 및 30미터급의 수퍼요트 계류유치를 위하여 별도의 전용 계류구역을 마련하고, 클럽하우스에 CIQ사무소 설치, 선박 및 승선인원의 원활한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유통을 위해 블라디보스 폴에서 동해를 이용, 대거 남하하여 부산 수영요트경기장에서 장기간 계류하는 다수의 러시아국적 요트와 보트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후포 마리나로 입항 시 장거리 항해에 따른 연료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지리적 잇점과 경제성, 저렴한 장기계류비용 및 승선인원들의 출국과 귀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해항의 DBS 페리와 연계를 적극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임군수는 “후포 마리나항만의 열악한 지리적 접근성을 취약점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으나,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조성되는 2017년 이후 인근 고속도로, 철도 연결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울진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통해 울진군이 동해안에서 해양레저 거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시될 계에서 마리나항만 조성 이후 운영단계까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죽변 호박카페 임대

- ▶ 인테리어 내부시설이 완비돼 임대시 추가부담 없이 바로 영업할 수 있음.
- ▶ 가게 위치는 죽변북로 10-중앙통으로 지역의 상업지역 중심가이며 최적의 상권임.
- ▶ 보증금 200만원, 월세는 주인 상담 절충 가능함.

연락처 010-6524-2317



이이재 국회의원... “희망찬 새로운

[김영호 기자] 강원도의 동해안 남부에 위치한 동해시와 삼척시를 지역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이재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는 항상 조용하면서도 잘못된 일이나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과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쏟아내면서 조선의원이라기 믿기 힘들 정도의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의원은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인상적인 국회의원상을 남겼다.

일본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전형적인 과거사 왜곡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시·삼척시)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전형적인 과거사 왜곡”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합상 당시,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각료들은 때만 되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고,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문제는 현 아베 정권 들어서는 역사 왜곡의 발언과 행위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일본의 과거 역사를 바꾸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94명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징용된 조선인 중에는 키와 몸집이 작아야 해서 탄광 작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13살, 14살 어린이들도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 종종에서도 알고 있느냐고 종종에게 물었다. 또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의 자료화면을 통해 강제동원 전체 대상자(782만 7,355명-추정자료) 중 피해신고자(22만 4,835명)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을 10월 하순경 개관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부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강제동원조 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회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



이이재 국회의원

면, 위원회 존속기간은 이번 달 6월 30일로 종료된다. “제 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①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는 메르켈 총리는 전쟁배상 책임으로 독일정부와 기업이 약 640억 유로(약 81조 원)를 지불했다고 밝혔다(‘07년 기준)며 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보상의 전제조건인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파악된 피해자들조차도 아직까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자력으로 일본 전법기업(미쓰비씨)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중이며, 오는 24일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유족들은 승소한다고 해도 미쓰비씨가 판결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예정)

이어 이 의원은 780만 명 이상이 강제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강제징용의 기록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역사의 상처는 진실을 왜곡할 때 더 커지고 깊어져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된다”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상처를 내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남기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등재노력을

“가장 낮은 자세로 사회의 약자와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 삼척원진백지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 종합청사 방문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면서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서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땀이 서려있는 대한민국의 윤리를 역사와 정체성의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원전 제외, 동서고속도 등 지역 현안 쟁개

이이재 의원은 앞서 16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동철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문재

도 2차관을 만나 이달 말 확정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원전을 반드시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초 6차 계획의 원전 4기 건설계획이 이번에 그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그 2기를 어디다 건설할지는 주민수용성과 경제성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삼척원전건설은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최종임지를 3년 뒤인 2018년까지 미룬다는 것은 정부가 또 다시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삼척원전을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 되어 무한 봉사에 최선 다할 터”

이날 면담에는 김양호 삼척시장과 정진권 삼척시의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 의원은 열동열 국회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과 동서고속도로추진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15일 세종시 종합청사를 방문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구간 조기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을 건의하는 15만432명의 주민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동서고속도로는 안중~충주(103.3km) 구간의 경우 2013년 개통됐으며 충주~제천(23.9km) 구간도 7월 개통하는 등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제천~삼척(123.2km) 구간만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이재 의원은 이날 유일호 장관에게 “제천~삼척 구간 미주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의 빈익빈, 부익부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산업기관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약자와 서민도 꿈꿀 수 있도록 노력

이이재 의원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잘사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실하게 맨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눈물짓지 않는 희망의 정치를 펼치는데 노력해 왔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욕먹지 않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그는 “흙자 끓는 꿈은 꿈에 불과하다. 하지만 함께 끓는 꿈은 현실이 된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은 이를 수 없다. 시민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대정신에 충실했던 가치 중심의 정치, 희망의 정치로 동해·삼척에 과감한 변화의 새 바람을 불려오려 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가치 있는 사회를 위해 온 열정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선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면서 희망을 주는 정치로 좀 더 품격 있고, 그래서 정치인도 존경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언제나 그렇듯 이이재 의원은 바쁘다. 그래서 취재가 더욱 어려울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이이재의 매력이 돋보인다. 그가 지역민과 함께 꾸려는 희망의 꿈을 잘 펼쳐나가길 바란다.

이이재 국회의원 활동



▲ 어르신 무료배식 봉사활동



▲ 좋은국회의원상 수상



▲ 동해수협어판장 체험



▲ 동해항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과 방문



▲ 북평동 의정보고회



▲ 동해시 발한동 현장답사



▲ 사랑나누기 의료봉사 참여



▲ 목호황재창조선포식



▲ 일본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 저지 관련 외신기자회견



▲ 대정부질의

울산 관내…스쿨존, 주차장에 잠식당해

울산시민연대 “안전하고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보장돼야”

[김영호 기자] 울산 관내 스쿨존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현실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1995년부터 펼쳐오고 있다.

울산 관내 스쿨존 지정현황은 초등학교는 모든 곳에 되어 있다. 정원 100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173곳이, 어린이집은 45곳이 지정되어 있다. 유치원의 경우 초등병설 유치원의 영향이 크다.

중·남구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는 스쿨존에도 배정한 곳이 있다. 남구에서는 전체 30개 학교 중 거진 절반에 해당하는 12개 학교에서 중복되는 곳으로 확인됐다. 중구의 경우는 21개 학교 중 2개교가 중복됐다.

또 학교와 맞닿아 있는 앞길과 옆길 그리고 뒷길과 같은 인접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다. 이런 곳이 남구는 8개교, 중구는 5개교가 해당한다. 주차대수는 각각 133면과 64면에 달했다.

이런 곳은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옆문이 있는 쪽이나 뒷길 등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스쿨존 문제는 일방적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실제 지정만 해놓고,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반복으로 벌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행정 그리고 주변 거주민이나 삼인 등과 같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60.9%가 9m 이하 간선도로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어린이의 보행



월봉초 스쿨존-거주자우선주차구역 중복 현황.

주1) 분홍선-스쿨존 지정구역, 색깔원-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구역.
주2)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현황에 어린이보호구역 자료 맵핑.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지정	전체	지정	전체	지정
계	121	121	195(82)	173	943(46)	45

울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괄호 안은 정원 100명 이상인 곳. 단위: 개

- 스쿨존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스쿨존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중복	주차대수 총계
남구	12개교	223면
중구	2개교	7면

스쿨존-거주자우선주차제 중복 현황

특성 즉 차량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주차문제보다는 보행안

전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다.

스쿨존이 유일무이한 어린이 보행

안전 정책은 아니다. 또한 스쿨존 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스쿨존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 하더라도 스쿨존 밖의 생활권 도로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비장애인에게도 상시적으로 위협에 노출된 곳이 많다.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폐적한 보행환경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쿨존을 벗어난 생활권 도로의 보행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종국에는 보행친화도시, 걷기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다수 비장애인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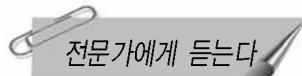
울산시민연대는 “스쿨존에 주차장이 들어선 이번 사례는 행정의 과오와 제도의 미비 그리고 자동차 중심 도로/보행정책도 영향이 크다. 하지만 보행자이자 학부모 그리고 동시에 운전자인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비롯한 다양한 불법주정차 관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부분적으로 차고지 증명제, 주차공동이용제와 함께 시민 또한 주차는 낮은 수준이더라 하더라도 비용이 수반된다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 또한 동시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안전보행을 위한 정책은 곧 도시계획 차원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의원…인터넷전문은행 허용방안, 철회되어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조건을 크게 완화시키며 ICT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18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다음카카오가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혀 설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은산분리 규제가 ICT기업을 비롯해 창의성이나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의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다른 견해를 보이며 입장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기식 의원의 입장이다.

18일 금융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게 은행지분보유한도를 50%까지 상향하여 허용하고,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로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율을 금지하고 그 소유지분을 4% 이하로 제한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주장이다.

첫째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2015년 기준 61개이지만, 공정위에서 이 기준을 5조에서 7조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금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 배제 기업'의 숫자도 현재 금융위가 상정하고 있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이미 부채비율이 낮고 은행 차입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이들이야말로 차입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성이 훨씬 높은 기업이기 때문

은산분리 제도의 본질 외면하고 대원칙 함부로 무너뜨리는 것 하반기 법안 제출해 연내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터무니없어"

'핀테크' 금융혁명 시작됐다

〈Finance+Technology〉



에 오히려 이 기업들이야말로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높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방안으로는 반대로 대기업들만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사금고화 위험이 보다 높은 기업들은 자유롭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거래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수많은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에서 거래제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다. 이미 법률상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법이 습하게 자행되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재무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되거나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로 금융위에서는 인가 과정에

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철회하려 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심사에도 불구하고 사금고화하는 대주주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에는 비판여론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였지만, 도입 이후 경쟁 강화 등 다양한 논리로 결국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처럼 인가 대상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가지고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업자본에 은행지분 보유를 50%까지 허용하고, 더구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기존 은행과 똑같이 허용해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P2P영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금융위원장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바로 그 P2P 영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열어주면, 종국에는 금융위원장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P2P 영업 역시 허용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정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부인해 왔고, 이제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입법 절차를 밟아도 연말이 가까워 서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고 영업범위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쟁적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졸속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다시 발목잡기 운운하며 국회를 협박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는 국회를 통법부 내지는 행정부의 산하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 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임을 밝혀둔다.

관세청, 면세점 평가점수 공개 계속 거부...재벌특혜 의혹 증폭

2월 제주 롯데면세점 선정 세부평가 결과 국회 공개 또 거부

‘중견기업 충족요건’에 ‘연결재무재표’ 아닌 ‘개별’ 적용도 문제

[김영호 기자] 정부가 재벌기업에 면세점 사업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후보 심사의 세부항목 평가점수와 심사위원회 명단, 배점 변경사유 등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갈수록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 정부가 정한 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자허가 충족요건 역시 실제 대기업이 편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세청이 ‘황금알을 낳는’ 국내 면세점 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강화하자는 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재벌대기업 특혜를 주는 것이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관세청장, 제주 롯데면세점 세부평가 결과 공개 거부

관세청은 지난 2월 제주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2015년 3월 21일)에 다른 제주시내 면세점의 후속사업자로 신라와 부영을 탈락시키고 또다시 롯데면세점을 선정한 바 있다. 롯데 면세점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점유율 50.8%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계열의 사업자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중 ‘총점’만을 공개하고 심사기준표 상의 세부 항목점수 공개를 계속 거부해 왔다. 이번 평가결과 총점은 롯데가 84.07점, 신라가 82.79점, 부영은 82.32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특허심사위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평가범주(항목)은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등 5개 대항목과 각각의 대항목에 2~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본지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청에 지난 2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심사기준표상 각각의 대항목 및 소항목 평가점수를 공개토록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거부해 오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주요 면세점 업체별 매출 기준 점유율

(단위: 억 원, %)

구분	'10		'11		'12		'13		'14	
	매출액	점유율								
대기업	37,815	83.7%	45,445	84.6%	54,699	86.4%	60,221	88.1%	73,398	88.3%
공기업	5,026	11.1%	5,647	10.5%	5,743	9.1%	5,578	8.2%	5,669	6.8%
중소중견	2,350	5.2%	2,624	4.9%	2,850	4.5%	2,527	3.7%	4,012	4.8%
합계	45,191	100%	53,716	100%	63,292	100%	68,326	100%	83,077	100%

● 대기업은 롯데, 신라, SK, 신세계, 한화 등임.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도 김낙희 관세청장에게 세부평가 점수 공개를 재요구했으나 김 청장은 세부항목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청이 대기업에 유리한 세부항목에 더 많은 점수를 줘서 사실상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오고 있다. 이 또한 세부항목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관세청장, 최근 평가기준에서 배점도 변경

관세청은 또 지난 2월 롯데면세점 선정 직후 심사기준을 변경,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점을 바꿨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당초 5가지 평가범주 가운데 ‘면세점 관리능력’은 3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25점이 할당되어 있었으나, 4월쯤이 기준을 바꿔 ‘면세점 관리능력’에 25점, ‘운영인 경영능력’에 30점을 배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제 면세점 운영업체의 운영 능력보다는 자본력에 더 많은 배점을 부여한 것이어서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점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냥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배점 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합당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관세법 시행령의 ‘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 제192조2항에 따르면 중견기업 충족

요건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 미만일 것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기로 하고 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1개를 신규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대기업 7개, 중소중견기업 14곳 신청서 제출)

현재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시행령이 지정한 ‘자산 및 매출 규모’를 충족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개별기업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연결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현재 입찰제안을 제출한 중소중견 기업 가운데는 개별기업 재무재표가 아닌 ‘연결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준은 홍종학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기업 특혜로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은 중소기업의 보세판매 사업에의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의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며 “이에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장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세부점수 비공개, 평가기준 변경, 중소중견기업의 자산-매출 충족요건 등을 볼 때, 이처럼 정부가 재벌대기업

에 면세점 허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동안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증가해왔다.

김낙희 관세청장, 국회에서 ‘재벌점유율 하락’ 엉터리 통계발표

한편, 이와 관련해 김낙희 관세청장이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서 밝힌 엉터리 통계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날 김낙희 청장은 대기업 면세점 점유율과 관련, “2013년에 82.9%였고요. 2014년 말에 81.3%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현재로는 79.8%로 조금씩은 줄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관세청장이 제시한 통계는 전체 대기업 점유율이 아닌 롯데, 신라의 점유율 수치만 합친 것이다. 나머지 SK, 신세계, 한화의 점유율을 합치면 다른 수치가 나온다. 이는 마치 면세점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조작된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대기업(롯데, 신라, SK, 신세계 등) 면세점의 점유율은 2010년 83.7%에서 84.6%, 86.4%, 88.1% 그리고 2014년 88.3%로 증가했다. 다만 2015년 5월 대기업 매출액 점유율이 87.3%로 다소 하락했으나 연간 점유율로 보긴 힘들다.

반면, 중소중견 기업의 점유율은 2010년 5.2%에서 4.9%, 4.5%, 3.7% 그리고 2014년 4.8%로 하락하거나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울진의 神松, 대왕금강송을 보존하자!

[기고]



임태수 대왕금강송보존회장

우리민족과 소나무

소나무는 배달겨레 민족성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의 나무다.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끊어지게 버티어 온 소나무는 나라의 외환이 있을 때에 정감록 비결서에, 피난처는 이재증송으로 예언되어 병자호란을 피난케 하는 데도 이용되었고, 일제 강점시에는 광복의 꿈을 품고 만주에서 투쟁하던 독립군들이 일송정 푸른솔이라고 노래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애국가에서는 '남산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이라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는 한민족의 나무이다.

소나무는 사철 푸르러 항상성이 있고, 장수(長壽)와 절개, 지조를 상징하며 기품 있는 품새로 미관이 뛰어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천숙함에다가, 몸체와 잎 뿌리는 오랜 전통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여온 우리의 생활과는 밀접한 나무이며, 오랫동안 우리들의식 속에 자리잡은 상징성은 삼성각(칠성각)에 봉안된 산신도에 백발노인, 호위하는 호랑이, 노송, 3가지 요소가 일체를 이루고 있어 항상 친근한 나무인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정서적인 교감을 가지게 되면, 인격화된 자연으로 탑바꿈하게 될 수 있다. 소나무에게 인격을 부여한 예로는 경북 예천에 세금을 내는 석송령,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 소리를 내어 알린다는 "거창



당산리의 당송

또 충북 피산에 왕소나무,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 '정이풀송' 있었으나, 2012년 태풍 <블라벤>으로 인하여 600년 된 왕소나무는 쓰러져 고목이 되었고, 이날 속리산 정이풀송도 낙뢰에 반쪽이 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대왕금강송 울진에 우뚝서다

전국에 명품소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 기상이 웅장하고 미려한 소나무가 금강송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보통 300년 이상 수령을 가진 소나무를 노송, 고송, 초송이라 하며, 신송(神松)은 경이로움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소나무 중에서도 울진군이 자랑으로 여기는 금강송 군락지 소재 금강송면 소광리 산 11번지에서 천여년의 수령을 가진, 최고의 제왕 품새의

소나무가 출현하여 위용을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대왕금강송"이다. 이 노송의 위치는 안일왕 산성의 험난한 지점에 최고의 권좌에 올라 있는 대왕형국이다. 대한민국 최고 소나무는 "대왕금강송"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는 세계 최고의 소나무 군락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산림학계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다. 출입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남부산립청장의 고시로 전 구역 주민출입통제)에도 금강송 보호라는 대의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금강송 군락지 보호에 전군민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23일 강석호의원 외 13명의 의원들도 "금강소나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374) "입법에 동참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소광리 일대 울진 금강송 군락지는 조선 숙종 때부터 황장봉산제도로 엄격하게 관리해 왔으며, 200살 넘은 금강송이 8만 그루 이상 군락

을 이루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면위는 8,205ha, 울진군 전체 땅의 약 10%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황장봉산으로 관리되어 오던 소광리 일대 울진 금강송은 전란과 화마의 침공에도 보존되고, 간악한 일제식민지 시대 수탈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살아 남았다. 해방 후 1959년 전국 최초 육종립으로 지정되어 산림청이 관리하고, 현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구역도 금강송면으로 바뀌어 주민들에게 자랑이다.

울진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금강송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발의로 구성된 울진 금강송 군락지를 세계 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울진금강송 세계 유산등록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영수)를 결성했다.

지난 6년 동안 거군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에는 "대왕금강송 보존회" (위원장 임태수)가 결성되어 금강송 군락지와 대왕금강송 보존과 브랜드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강송 군락지와 대왕금강송으로 울진군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자

울진에 명품소나무 대왕금강송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것을 브랜드화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 단체가 출범한 이후 지방정부에서는 각자 지방고유 브랜드 개발에 열을 올리고 그것을 성공한 지역은 크게 발전을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정부가 일시적인 깜짝 이벤트로 하는 행사로는 성공 할 수가 없다. 기업의 얼굴이 브랜드이듯이 지방정부가 행한 각종 행사가 울진군의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만 울진의 대박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속담에 '구슬이 서랄이라도 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금강송 군락지와 대왕금강송을 울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오늘 울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코카콜라는 195개국의 다국적 합작투자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브랜드 가치가 100조이고, 쏘나타 2826억, 애니콜 3,278억, 신라면 285억으로 유명 기업의 브랜드는 자신의 경제적 가치로 계산한다 (1998 7.8 매경).

도쿄통신이라는 상호를 SONY로 전환하여 국제적으로 성공한 모리타 아키노 (1956)의 예지력과 질лет트라는 면도기 회사가 우리나라로 케트전기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권, 영업권 일부를 7년간 임대하는 조건 815억 중 660억이 브랜드 값이다.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는 중요하다.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대왕금강송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울진의 보배인 금강소나무의 경제적 가치주정을 연구한 자원·환경경제연구 14권 1호(신영철과 민동기;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제적 가치 추정 논문)에는 울진군 금강군락지 자산가치는 79조 5,015억으로 추정된다.

이중 직접 사용가치는 15조 1,490억원, 간접 사용가치는 31조 3,500억원, 선택가치는 15조 6,750억원, 보존가치는 17조 3,275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강송 군락지와 대왕금강송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명장 밑에 약풀 없다는 격언처럼 지도자의 관심이 최우선이다. '고급 브랜드는 고급답게 행동한다.'는 격언과 '브랜드는 홍보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기업적 마인드가 지도자(군수)에게 필요하다.

마케팅은 과학이며 예술이기 때문에 금강송군락지와 대왕금강송을 명품브랜드 가치로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각고의 노력과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공한 지방정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속담에 '구슬이 서랄이라도 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금강송 군락지와 대왕금강송을 울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오늘 울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시제품 설치도 및 사용 순서도



4단계 과정 1~2분 소요



주식회사 케이엠엑스

본사 :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3번길 35

TEL : (052) 277- 9890~1

FAX : (052) 277- 7966 * BUSINESS

사무소 :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63

TEL : (054) 781- 5330~1

FAX : (054) 781- 5332

<http://www.kemx.co.kr>